

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

보고안건(제26-3호)



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

2016. 5. 30

외 교 부

목 차

I. 검토배경	1
II. 현황 및 평가	2
1. 한국 개발NGO 현황	2
2. 개발NGO에 대한 정부 지원현황	3
3. 그간의 성과	3
4. 한계 및 개선방향	4
III. 향후 추진방향	6
1. 개요	6
2. 세부추진계획	7

I. 검토 배경

□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중요성 증가

- 2015.9월 유엔개발정상회의*에서 채택된 「2030 지속가능개발의제」는 '효과적인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'을 주요 목표로 포함(SDG 17번 목표)

* 대통령님께서도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'정부가 새로운 개발의제의 이행을 선도해나가는 과정에서 민간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' 언급

- 「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2016-2020)」에도 「함께하는 ODA」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명시

-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(부산글로벌파트너십)에서도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

- 주요 선진공여국들도 개발협력의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집행

* 양자원조 중 NGO 비중은 2009년 기준 OECD DAC 평균 17%인데 비해, 한국은 2%(아일랜드 37%, 네덜란드 30%, 스위스 27%, 스웨덴 26%, 프랑스 1%, 일본 2%)(OECD, 2011)

□ 개발협력구상*의 내실 있는 이행 협력 제고

- 개도국 현지 지역사회(grassroots level)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 개발협력사업과의 시너지 창출

* ①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, ②모든 이를 위한 안전한 삶, ③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, ④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, ⑤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

II. 현황 및 평가

1 한국 개발NGO 현황(2013년 기준)

- (NGO규모) 국내 개발NGO는 240여개로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형단체*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 규모

* 굿네이버스, 월드비전, 세이브더칠드런, 어린이재단, 기아대책, 굿피플 등

총 국제개발협력 사업금액 규모	단체 개수
1억 원 미만	20개
1~3억 원 미만	31개
3~5억 원 미만	14개
5~10억 원 미만	20개
10~50억 원 미만	21개
50~100억 원 미만	-
100억 원 이상	7개
합계	113개**

* 출처: 「2013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(CSO) 편람」 (KOICA, KCOC발간)

** 241개 단체 중 설문조사에 응한 단체

- (해외사업규모) 100여개 개도국에서 3,900억원 규모 1,300여개 사업 집행

- 지역별로는 아시아 55.5%, 아프리카 31.2%, 중남미 5.6% 순이며,
- 분야별로는 보건 36%, 교육 26%, 농림수산 20% 순

- (사업재원) 개인후원 38%, 기업후원 14%, 정부지원 10% 순

- 소수 대형단체에 지원이 집중*

* 대형단체들이 정부지원의 65.7%, 개인후원의 82.6%, 기업후원의 76.6%를 차지

2 개발NGO에 대한 정부 지원현황

- (지원규모) 연간 230억원 규모로 70여개 NGO의 106개 사업 지원
 - '16년 외교부(KOICA)의 개발NGO 지원예산 규모는 약 230억원
 - * 1995년 4.8억 → 2000년 6억 → 2005년 27억 → 2010년 149억 → 2016년 230억
 - 총 사업비의 최대 80%까지 지원(매칭펀드 방식)
 - 단체별 연간 지원가능사업 최대 5건, 사업별 지원상한액 4억원
 - 70여개 NGO에 대해 30여개국에서 106개 사업 지원 중
 - 지원분야는 교육 34.6%, 보건 33.6%, 농림수산 13.4%, 기타 18.4% 순
-
- (사업선정)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
 - (선정기준) △지원자격 및 조직역량, △사업타당성, △예산 적절성 등
 - (선정절차) ①KOICA 사업선정 심의위원회가 NGO 사업제안서를 사업선정기준에 따라 분야별로 심사하여 고득점순으로 사업 선정 → ②외교부 민관협력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

3 그간의 성과

- 사업규모 확대 및 효과성 제고
 - 1995년 4.8억원(37개 사업)에서 2016년 230억원(106개 사업)으로 확대
 - 2012년 이전에는 사업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낮은 단년도 사업 위주였으나, 2016년에는 사업의 90% 이상이 다년도 사업
 - * 단년도 사업은 시설건축이나 단기 직업훈련 등 투입(input)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, 현지주민 자립역량강화 등을 포함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능

□ 성과관리 강화

- 2016년부터 사전에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「산출물 기반 분담금 지급 제도」* 운영 중

* 당해년도 사업실적 부진시 차년도 사업예산 지원규모에 반영

□ 민관파트너십 및 역량강화 지원

- 2012년 정부, 시민사회, 기업, 학계 등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총 250여개 회원이 참여하는 개발협력연대(Development Alliance Korea, DAK) 출범(KOICA가 사무국 역할 수행)

- 민관협력사업 발굴·추진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상호컨설팅 및 정보공유의 장을 구축

- NGO의 사업기획·수행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「인큐베이팅 프로그램」*을 운영, 역량 있는 NGO 육성

* 사업기획 수행역량 기본 및 심화교육, 현지조사 컨설팅 및 조사경비 지원, 현지 전문교육 제공

**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27개 단체 지원(2015년에는 신규단체 20개 포함 31개단체 지원)

4 한계 및 개선방향

- (정부정책과의 연계) 양적인 성장에 비해 민관협력사업과 정부 ODA정책간 연계가 다소 부족

☞ 개발협력구상 등 정부 정책과 민관협력사업간 연계 강화

- (효과성·투명성) NGO협력사업 대부분이 연간 1~3억원의 소규모 사업이며,사업 수가 100여개에 달해 효과적인 성과관리에 한계

* OECD DAC 회원국 설문조사(OECD, 2011)에서도 높은 거래비용(transaction cost)을 NGO협력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지적

○ 2016년 민관협력사업의 외교부 보조금화에 따라 제도적 보완
필요성 제기

* 지난 20년간 여타 ODA예산과 마찬가지로 KOICA출연금으로 운영되던 민관협력사업
(345억 규모, NGO외에 대학과의 민관협력사업도 포함)이 2016년부터 외교부 보조금
사업으로 이관

☞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관련 제도 보완

□ (ODA역량) 국내 개발NGO 대부분이 역사가 10년 이내로 짧고,
사업기획 및 수행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다수

☞ NGO의 사업역량 강화 지원

Ⅲ. 향후 추진방향

1 개요

비전

시민사회와 「함께하는」 효과적인 ODA 구현



목표

- ◆ 민관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ODA 생태계 강화
- ◆ 우리 청년 해외진출 및 취업 기회 확대



추진방향

정책연계
강화

- 개발협력구상과 연계
-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이행과 연계

성과관리
강화

- 체계적 성과관리 체제 정착
- 정부내 민관협력 전담인력 확충 노력
- 보조금 전환에 따른 제도정비

NGO 역량
강화

- 맞춤형 역량수요 발굴 및 교육 확대
- 청년 NGO 전문인력 육성 지원
- NGO의 자발적인 책무성 강화 유도

2

세부 추진계획

①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계강화

- 개발협력구상 등 정부ODA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·지원
 -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개발협력구상 부합 사업 발굴 촉진
 - * 개발협력구상 중 새마을운동사업은 해당분야 사업실적, 전문성이 검증된 단체에 한해 지원
-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이행에 기여
 - 개별사업의 관련 SDGs 이행 공헌 정도를 사업선정 심사시 고려

② 성과관리 강화

- 사업 쏠 단계에 걸친 성과관리체제 정착
 - (사업 시행 전)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KOICA가 NGO와 협의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사업 성공 가능성 제고
 - (사업 진행 중) 민관협력사업 전문가* 현지 파견을 통해 성과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, 현장중심 사업관리 지원
 - * 2016.5월 현재 민관협력 ODA전문가 7명 파견 등(네팔, 미얀마, 몽골, 베트남, 모잠비크(말라위 겸임), 우간다, 케냐)
 - (사업 종료 후)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지원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사업효과성과 책무성 제고
- NGO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외교부 내 민관협력 전담인력 확충 노력
- 민관협력사업의 외교부 보조금사업 전환(출연금→보조금)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
 - 해외원조사업의 특성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필요

-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운영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장점과 보조금 관리의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방안 검토

③ NGO 역량강화 지원

□ SDGs 이행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

- 수요기반 맞춤형 NGO 역량강화 모듈 개발 및 교육 확대

예) △사업분야별 모듈 개발, △자료 발간(역량강화 가이드라인 등), △개발협력교육 전문기관과 협력(ODA교육원, KCOC 등)하여 NGO 맞춤형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

□ 청년 NGO전문인력 육성 지원

- 우리 개발 NGO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청년 NGO 활동가의 역할이 큰 것이 최대 강점

* 2013년 기준 개발NGO 고용인력은 총 10,680명, 그 중 개발협력사업 담당 인력은 644명

- 사업선정시 청년 NGO활동가 비율도 고려함으로써 청년 NGO 활동가 육성 촉진

□ NGO들의 자발적인 책무성 강화 노력 유도

- 호주 등에서 실시 중인 NGO 인증제 도입 방안 중장기 검토

<호주AusAID의 NGO 인증제 사례>

- 개요: NGO 인증등급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별하여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NGO를 우대하는 제도
- 인증대상: 2년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운영한 개발NGO
- 인증기준: 단체의 정체성 및 구조, 개발철학 및 관리방안, 파트너십 및 개발협력에 대한 접근, 호주 커뮤니티와의 연계성, 재정 관리 및 위험관리 등 5개 영역 내 20개 세부 항목
- 등급분류: 완전인증(Full Accreditation), 기본인증(Base Accreditation)
 - 기본인증 NGO: 연간 약 15만 호주 달러 지원
 - 완전인증 NGO: 연간 약 30만 호주 달러 이상 지원

끝.